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0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29.

발 의 자 : 장종태 · 박정현 · 남인순
박홍배 · 이건태 · 박용갑
이재관 · 이연희 · 조승래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, 검사, 수사관서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, 수사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등 사전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, 취득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, 취득한 통신이용

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목적이 달성되는 경우 폐기하도록 하며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83조, 제83조의2, 제83조의5 및 제83조의6 신설 등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”를 “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은”으로, “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”를 “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과 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7항) 본문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9항) 중 “정보제공요청서”를 “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”로 한다.

다만, 제2호의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·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·보전이 어려운 경우

에만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 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다.

⑤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,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한 서면(이하 “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”라 한다)으로 관할 지방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⑥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, 검사는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8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제83조의5 및 제8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5(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제한 등)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를 제외하고는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③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3조의6(국회의 통제)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지유예 통보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대행기관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의3 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4조제5항제13호 중 “제83조제5항”을 “제83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4호 중 “제83조제7항”을 “제83조제9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·② (생략)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, 수사(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0조제1항·제3항·제4항의 범죄 중 전화,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),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(이하 “통신이용자정보”라 한다)의 열람 또는 제출(이하 “통신이용자정보 제공”이라 한다)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83조(통신비밀의 보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원,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(군 수사기관의 장,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정보수사기관의 장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u>다만, 제2호의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·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·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람 또는</u>

1. ~ 6.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(이하 “정보제공요청서”라 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④ 법원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제294조 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72조의 규정에 따른다.

⑤ 검사가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,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,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한 서면(이하 “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”라 한다)으로 관할 지방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⑥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

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

사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허가를 신청하고, 검사는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.

⑦ -----제3항-----

-----.

⑧ -----

-----제7항-----

-----.

⑨ -----

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
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
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
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
려야 한다. 다만, 통신이용자정
보 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
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
려야 한다.

⑧ (생략)

⑨ 정보제공요청서에 대한 결
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한다.

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
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제83
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
보 제공을 받은 검사, 수사관서
의 장, 정보수사기관의 장(이하
“수사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그
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
날(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
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
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
다)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
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

-----제7항-----

-----.

⑩ (현행 제8항과 같음)

⑪ 정보제공요청 허가청구서--

-----.

제83조의2(통신이용자정보 제공
을 받은 사실의 통지) ① ----

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
서면 또는 문자메시지, 메신저
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
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~ ⑧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통신이용자정보 보유 및 이
용기간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83조의5(통신이용자정보의 사
용제한 등) ① 제83조제3항에
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
받은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
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
된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통
신이용자정보를 이용하여서는
아니 된다.

②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
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이
용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
만료되거나 그 사용 목적이 달
성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이용
자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③ 수사기관등과 대행기관은
제2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
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그 밖에 통신이용자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</u></p> <p><u>제83조의6(국회의 통제) ① 국회 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통지유예 통보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대행기관은 국회의 상임위 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 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 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.</u></p>
<p>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다만,</p>	<p>제104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 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.</p>

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·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	13. 제83조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
14.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	14. 제83조제9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5. ~ 17. (생략)	15. ~ 17. (현행과 같음)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